



주간 통일정세

2012-2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은 두 달 전 논문 뒤늦게 공개(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즈음인 4월20일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밝힘.
 - 북한은 김 1위원장이 4월6일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을 상대로 한 담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첫 번째 노작으로, 같은 달 27일 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에게 한 담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를 두 번째 노작으로 규정한 바 있음.
 - 김 1위원장은 이번 논문에서 "김일성 동지는 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라며 "김일성 동지는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 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주체의 태양"이라고 찬양함.

- **北 김정일 死後 6개월...김정은시대 진입(6/17, 중국신문사)**
 -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6개월 동안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정권교체로 김정은 시대가 열렸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7일 보도함.
 - 중국신문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김 위원장 사망 후 6개월 특집 기사에서 이같이 평가했으며 이 매체는 우선 북한의 내정, 외교, 군사, 민생 분야 등에서 김정은으로 힘이 넘어왔다면서 북한이 이전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세계 앞에 실제 모습을 드러낸 게 특징이라고 지적함.
 - 이어 시계열적으로 볼 때 작년 12월 30일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의 추대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올라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 등극했고 지난 4월 11일 노동당 대표회의에서 노동당 제1서기, 그리고 이틀 후인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지명돼 군·당·정 3권을 틀어쥐었다는 게 중국신문사의 설명임.
 - 매체는 김정은이 선대의 선군정치 노선을 이어받아 국방역량 건설 강화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면서 대(對) 남한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친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함.



■ 김정은동향

- 6/12,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6.12 러시아 국경절 즈음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6.12,중통)
- 駐北 러 대사, 6.11 自國 국경절 즈음 리룡남(무역상)·리영철(黨 부부장)·공석웅·기광호(외무성·재정성 부상) 등 초청下 연회 개최(6.11,중통)
- 6/13, 김정은, 조선혁명박물관 건설에 모범을 보인 봉화지도국 노동자 등에 감사(6.14,중방)
- 6/17, 김정은 제1위원장,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전달(6.17,중방)
- 6/18, 김정은 제1위원장, 희천발전소 건설에 기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6.18,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 총정치국장, 6.12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현지요해(6.12,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6.15)] 만수대지구 창전거리건설 완공('11.5.22 착공, 인민극장·초고층 살림집 등)은 "인민사랑의 최고정화, 김정일애국주의가 안아온 세기적인 창조물"이라고 선전(6.15,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기술개건정형 현지 료해 및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시찰(6.15,중통·중방)
- 조선기록영화 '우리 당을 백전백승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향도', 6.16 김정일 黨 사업개시 48돌 즈음 인민문화궁전에서 상영(6.16,중통)
- 김영남, 최영림을 비롯한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성, 중앙기관 일꾼들 관람
- 北 단천제련소,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비료생산공정 건립(6.16,중통)

나. 군사

● 北전략로켓사령관에 김락겸...당중앙군사위원회(중합)(6/1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4월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전략로켓군 사령관(옛 미사일지도국장)에 김락겸 중장(우리의 소장에 해당)을 임명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동안 미사일지도국장은 최상려 상장(우리의 중장에 해당)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최상려는 2010년 9월 28일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인물임.



다. 사회·문화

● 北 아리랑공연 올해로 막 내린다(6/11, 연합뉴스)

- 북한의 대집단체조 '아리랑공연'이 올해 10주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와치'에 따르면 중국 고려여행사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평양 소식통이 올해 아리랑공연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밝힘.
- 고려여행사는 "아리랑공연은 지난 2002년 처음 선보인 뒤 2007년부터 매년 막을 올렸으나 시대상황에 맞춰 재구성하기 위해 막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지막 공연을 보고 싶은 고객들은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고 권고했으며 "내년은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이자 한국전 휴전 60주년을 맞는다"며 "아리랑공연 주최측은 전혀 새로운 공연을 내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 北 어린이 영양실조 심각(6/12, 연합뉴스)

- 수백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신체와 정신 발육에 필요한 음식, 의료 및 건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이 1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은 이날 발표한 북한의 인권 상황 최신 보고서를 통해 5세 이하 북한 어린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식량 부족난이 심각한 농촌 지역 어린이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전함.

● 北 "서해안 4월 말부터 심한 가뭄 지속"(6/12, 연합뉴스)

- 북한의 서해안지방에서 4월 말부터 시작된 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함.
- 통신은 "6월에 들어와 강원도의 고산별과 통천별을 제외한 동해안 지방에서는 20mm 이상의 비가 내려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서해안지역인 평양시와 남포시, 평안남도 일부와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10mm 이하의 매우 적은 비가 내렸다"며 "특히 평양별과 온천별, 은률별, 재령별, 연백별 등 서해안 중부 별방지대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4월 말부터 현재까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지역은 평양시 강남군, 황해남도 안악군, 황해북도 송림시와 중화군, 남포시 용강군과 강서구역, 황해남도 은천군 등이며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이 기간에 내린 빗물의 양은 1~5mm로 기상관측 이래, 평양은 10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라고 통신은 전함.

● 北 평양 능라유원지 7월27일 완공(6/13,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전승절(7월27



일을 맞으며 평양시민이 능라인민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자들은 남은 공사에 박차를 가한다"고 보도함.

- 조선신보는 "능라인민유원지 건설은 마감단계에 있다"며 "유희시설도 시험 운전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는데 평양 대동강 한가운데 있는 1km² 남짓한 섬인 능라도에 건설된 능라우원지는 능라곱등어관, 능라물놀이장, 능라우희장 등으로 구성됨.
- 신문은 "능라인민유원지 건설은 김정일 장군이 발기했다"며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유원지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줬다"고 강조함.

● 北 평양시 주택건설 마감단계...창전거리 완공(6/1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들은 평양시 중심구역의 창전거리의 주택단지가 이미 완공됐고 현재 평양시 외곽지역의 주택지구 건설도 마감단계에 들어갔다고 잇따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수도(평양)의 살림집(주택) 건설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공사성과를 나날이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용성과 서포, 역포지구를 비롯한 수도의 살림집 건설장에서 이미 수십 동에 달하는 고층아파트의 골조조립이 성과적으로 끝났다"고 밝힘.
- 평양시의 북쪽, 서북쪽, 남쪽에 각각 위치한 용성구역과 형제산구역 서포동, 역포구역 등 주민 거주지는 모두 평양시 외곽지역임.
- 노동신문은 "일부 시공단위에서는 골조 공사를 마감한 데 이어 미장작업과 건구(창틀과 문틀) 설치를 다그쳐 가까운 앞날에 살림집 건설을 완공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극장과 초고층, 고층아파트들, 각종 봉사시설이 멋들어지게 솟아오르고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가 참신하게 실현된 창전거리는 볼수록 희한하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수대지구의 옛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거리를 단 1년 만에 일떠세우는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사에 일찍이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강조함.

● 北 황해북도, 60년 來 최대가뭄(6/17, CCTV)

- 북한의 황해북도가 60년 만의 최대 가뭄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중국 중앙(CC)TV가 북한 매체를 인용해 17일 보도함.
- CCTV는 북한 전역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황해북도는 대부분 논밭의 농작물이 고사해가고 있고 피해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함.
- 이어 최근 집계로는 황해북도의 옥수수 재배지역 15%에 물 공급이 부족하고 그 가운데 2천여 정보(19.834km²)에서는 옥수수가 아예 싹도 틔우지 못한 채 말라죽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밀과 보리, 감자 등의 작물 수확 가능성도 떨어져 가고 있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황해북도(황주군·서흥군·연탄군·수안군·송림시의 피해가 그 중 심각)에서 2,000여 정보의 강냉이가 말라죽는 등 "현재 밀·보리·감자 농작물수확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黃北道의 흑심한 가물피해 심각' 보도(6.15,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美 "北 국제의무 준수 기대 변함없어"(6/12,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동으로 평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대해 "북한이 좋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good thing)'"이라고 말함.
- 놀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이웃국가들에 대해 어떤 형태의 도발적인 언행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적함.

● 이란, 북한에 분유 등 인도적 지원(6/12, 파르스(Fars)통신)

- 이란이 북한에 추가로 인도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Fars)통신이 11일 보도함.
- 이란의 적십자사 총재인 아불하산 파그히는 중국 등으로부터 분유 등 식품과 각종 의료 관련 물품 등 구호품을 구입해 북한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북한 측에 통보함.
- 북한 적십자사 관계자는 앞서 이란으로부터 담요와 텐트 등 구호물품들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하고 향후 몇 개월 내 강한 폭풍우가 예보돼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함.

● 중국군, 압록강서 부교 이용해 도하 훈련(6/13, 연합뉴스)

-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압록강변에서 중국군이 도하 훈련을 하는 현장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함.
- 중국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 4시 압록강을 끼고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단둥 시내 중심가에서 강변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7~8km가량 떨어진 강가에서 얼룩무늬 군복에 주황색 구명조끼를 착용한 중국군 100여명이 부교(浮橋)를 이용해 도하 훈련을 하고 있었음.



- 군인들은 6~7척의 소형 선박으로 길이 20~30m의 부교 10여개를 강이쪽저쪽으로 이동시키며 유사시 인원과 장비가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임시교량 설치 훈련에 열중함.
 - 중국군의 훈련이 진행되던 시각에 강 맞은편 신의주 쪽 강가에는 정박 중인 북한 화물선 몇 척이 눈에 띄는 별다른 인원이나 장비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둥 주민들은 예전에도 중국군의 압록강 도하 훈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힘.
- **中외교부, '미사일차량 北수출 보도' 부인(6/13,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탑재 차량을 판매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량 살상무기 및 운반 도구의 확산에 결연히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자체적인 반확산 수출 법규를 준수해왔다"고 밝힘.
 - 류 대변인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탑재 차량을 판매했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관련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중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와 중국법을 위반하는 물품을 수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임.
- **北 대표단, 베트남 농촌개발 현장 방문(6/13, 연합뉴스)**
- 김영일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베트남 북부 타이빙성을 방문, 현지의 농촌 개발 모델을 둘러봤다고 베트남 언론이 13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타이빙성 공산당 짠 깜 뚜 서기는 12일 북한 노동당 대표단과의 실무회의에서 베트남 정부의 신농촌개발계획(2010~2020년)에 따른 지역발전상을 소개하면서 2020년이 되면 모든 지역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신농촌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북한 노동당과 베트남 공산당의 협력 연대를 강조하면서 "타이빙성과 인민들은 북한 노동당이 과거 민족통일과 독립을 위한 전쟁, 이후 베트남의 국가 건설과 국방에 기여한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김영일 비서는 타이빙성의 농업생산과 빈곤 해소, 고용 등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베트남 공산당의 올바른 정책으로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고 답함.
- **中 훈춘 '복중 경협' 급진전..단둥에 도전장(6/16, 연합뉴스; 경제관찰보)**
-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 훈춘(琿春)이 복중 경제협력의 신흥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최근 취업비자를 내준 북한 근로자 100여명이 시범적으로 훈춘 인근의 투먼(圖門)에 있는 중국 기업에 채용



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측은 시범사업의 추이를 보가면서 인력 공급 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매체인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16일 훈춘과 단둥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협 현황을 비교하면서 "훈춘의 급부상이 단둥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신문은 훈춘의 철도, 고속도로 등 물류망이 빠르게 개선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단둥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변경 무역상들이 최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함.

● ITU, 北에 전파교란 조사협조 요청(6/16,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지난 4~5월 한국에서 발생한 GPS(위성위치 확인시스템) 전파교란 사건의 진원지를 파악하는 조사와 관련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산자이 아차리아 ITU 선임공보관은 이날 "북한 정부에 한국 영토에 있는 항공기, 선박들의 운항을 방해한 (교란) 전파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한국 기지국들이 겪은 전파 교란의 근원지를 찾아내는 데 긴급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힘.

● 北외무성, 힐러리 장관 실명 비난(6/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7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힐러리는 미국의 경제난과 실업대군 구제에 신경 쓰는 것이 주제에 어울릴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요즘 미국 당국자들이 말끝마다 우리의 인권문제, 민생문제를 운운하는데 그 대표적인물이 바로 힐러리"라며 "공화국을 장기적으로 적대시하고 위협해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미국이 이제 와서 우리보고 민생을 첫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가증스러운 위선"이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미국이 말로는 우리에게 대해 적의가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계속 적대시하는 한 우리의 핵 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의 군수공업도 이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면서도 핵 억제력을 자체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와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 노동당 대표단('김영일' 黨비서)과 베트남 공산당 대표단('황 빙꾸언' 黨 대외부장) 사이 회담, 6.11 하노이에서 진행(6.12, 중통)
- 美-러의 '美-NATO 유럽 MD체계 창설문제' 관련 "정치군사적 대립 격화" 예상 전언(6.15, 중방/유럽미사일방위체계를 둘러싼 러-미 사이의 대립)
-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6.17), 힐러리 美 국무장관의 對北발언(민생문제 우선) 관련 설명거론 비난하며 '행동을 계속 적대시 하는 한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 이라고 위협(6.17, 중통)
- 北 노동당 대표단('김영일' 黨비서)과 미얀마연맹연대성발전당 대표단('우테인' 조직담당비서) 사이 회담, 6.14 진행 및 연회 참석(6.17, 중통)

3. 대남정세

- 파주시, 6~9월 개성공단 말라리아 특별 방역(6/11, 연합뉴스)
 - 개성공단 지역에 말라리아 예방 특별 방역이 실시된다고 11일 연합뉴스가 전함.
 - 경기도 파주시는 6~9월 매월 1회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특별 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임.
 - 방역은 14~15일이며, 파주 방역반 7명과 차량 2대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임.
- 北 "남보수언론 비명 터질 날 멀지않아"(6/11, 평양방송)
 - 북한이 11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사를 겨냥해 "비명이 터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평양방송이 전함.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이날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새로운 악행을 연출하고 있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물론 KBS·CBS·MBC·SBS 방송국 자리표도 확정해 놓고 불마당질할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우리는 남조선 보수언론들이 이명박 X새끼 무리와 동조해 나선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엄숙히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보수언론들이 이명박 X새끼와 한 짝이 돼 어린이들의 경축행사에 대해 시비하다 못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또다시 중상모독했다"고 주장함.
- 北 "정몽준·김문수 친북언행 공개할수도"(종합)(6/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등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의 친북·중북 연행을 공개할 수 있다며 "정몽준, 김문수 등이 우리에게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온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날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공개질문장을 통해 "최근 남조선에서는 보수패당에 의해 전례 없는 중북세력 척결 대광란극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패당은 통합진보당 사태 등을 계기로 저들의 반통일대결 책동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조리 중북좌파 감투를 씌워 매장하려 한다"고 전함.

● 北 "南측 간첩사건은 자작극·대북도발"(6/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최근 남조선의 간첩소동은 이명박 패당의 날조극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국면전환을 노린 유치한 자작극'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그 무슨 여자간첩사건이니 비전향장기수 출신 간첩사건이니 하는 것은 모략과 날조에 이끌리 난 역적패당에 의해 계획되고 연출된 서퍽 짜리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극도의 통치위기에 빠질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들을 꾸며내 여론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는 것은 괴뢰 통치배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보수패당은 이번 간첩사건들을 새로운 공안정국을 조성해 중북세력 척결 소동에 명분을 세우고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탄압공세를 강화하는 데 써먹으려 한다"고 비난함.

● 北, 6·15선언 12주년 맞아 대남 맹비난(6/14,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들은 6·15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자주통일의 대강'이라며 "공동선언을 거부한 이명박 정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14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6·15 북남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원칙과 방안, 구체적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새 세기 자주통일의 대강"이라고 강조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15통일시대가 열린 것은 김정일 동지의 비범한 영도력과 넓은 포용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며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진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북남선언들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자주통일도 민족번영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했다"고 주장함.
- 통신은 "남조선 이명박 역적패당은 집권 초기부터 6·15 북남공동선언을 거부하고 체계적으로 반공화국 책동과 노골적인 비난을 일삼아왔다"며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미국과 공모해 조선반도를 세



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보수패당은 제 족속들의 북(北) 방면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우겨대지만 그것은 눈감고 아옹 하는 격"이라며 "그때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공동선언도 지지하며 자기들과 하면 무슨 일든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빌붙고서는 지금에 와서 시치미를 떼고 종북소동까지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철면피성과 저열성, 추악성을 그대로 드러낼 따름"이라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혈뜰고 '친미사대, 동족대결로 온 겨레에게 불행만 가져온 역적패당의 죄행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동(6.12,중통/6.15공동선언을 말아먹은 역적무리의 죄행)
 - 6.15공동선언 남측위 서울본부 등 31개 단체들, 6.7 청와대 앞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진행(6.12,중통)
- 北 「조평통」 서기국, 6.15 남측의 '종북' 논란은 '남북문제'라고 시비 및 새누리당과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등 입장 표명' 재차 주장 '보도 제1001호' 발표(6.15,중통·중·평방)
- '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관련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6.15통일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자"고 선동(6.15,중통·중방·노동신문/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 韓美(연합해상훈련) 및 국군(포항 특정경비지역사령부 2012 화랑훈련·연합해상훈련·대규모 기동훈련) 훈련 계획·실시 등 인용 비난(6.15,중통·중방)
- 李 대통령,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의 '北 개혁 개방' 발언 관련 "체제통일 기도의 뚜렷한 발로"라며 '역도의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공상'이라고 비난(6.16,중통·노동신문·평방/속에 칼을 품은 자의 희떠운 노죽)
- 李 대통령, 美 국회 하원의원단 접견시 北인권문제 거론 관련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반통일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속심'이라고 비난(6.16,중통·노동신문·중방/인권 제창자들이 빚어낸 참혹한 현실)
- 종북세력문제 관련 '대선을 앞두고 종북세력 척결소동을 벌이는 것은 통합진보당 말살, 야권연대 파괴를 통한 재집권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지속 비난하며 '反정권투쟁 선동(6.16,평방/쓸어버려야 할 대상)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유엔안보리, 대북전문가패널 활동기한 세 번째 연장(6/13)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1년 더 연장됐음. 유엔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활동 기한을 2013년 6월12일까지 연장기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대북 전문가 패널은 2009년 6월12일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등 7개국 전문가로 구성돼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수집, 검토, 분석, 이행개선 권고 활동을 벌이고 있음. 활동기한은 1년간으로 2010년 6월12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금까지 1년씩 2차례 연장된 바 있음.
- 패널은 지난해 5월 대북 제재위에 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농축우라늄(UEP) 프로그램 개발을 '군사적 목적'이라 규정하고, 북한과 이란이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통해 금수 무기들을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음. 그러나 중국이 보고서의 채택 및 공식 발표를 거부해 대외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못했음.

● 북핵 6자회담 美대표 "현단계 협상재개 좋지 않아"(6/14)

- 지금 당장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을 달래는 정책만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음. 지난 주 러시아를 방문한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14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유력 일간 신문 '코메르산트'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 전망과 관련해 "지금 협상에 복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주장했음. 그는 "우리는 북한과 양자와 6자 등의 형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복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참가국이 북한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흔히 러시아와 중국 측 파트너들로부터 '이것은 북한에 대한 도발이다. 그들이 나쁘게 반응할 것이다'는 등의 말을 자주 들음. 하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음. 그는 "비록 북한 정권의 체제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북한은 어엿한 국가이며 우리는 북한을 어린애가 아닌 어른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북한에 아첨



하며 그들을 달래려고 하면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미국과 북한이 지난 2월 말 동시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측간에 이뤄진 일련의 합의에 대해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여기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우리농 농축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지만 북한은 3월 중순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난했음. 그는 "북한이 20년에 걸쳐 약속과 파기를 반복해 왔지만 이번에는 약속에서 파기에 이르는 시간이 기록적으로 짧았다"며 "이제 북한의 말 가운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음.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중국처럼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러시아인들은 미국인들보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는 "내 느낌엔 북한이 러시아와 가장 직설적이고 솔직히 얘기를 나눈다"며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 통과 가스관과 송전선 부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 "만일 이 프로젝트들이 실현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우리도 이를 지지하지만 문제는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어떻게 3자 대화를 이끌지, 어떻게 북한의 정치적 보장을 받아낼지 등이 문제며 악마는 항상 디테일(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고 말했음.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지난 6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마르굴로프 아태담당 차관과 회담한 바 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 국제의무 준수 기대 변함없어"(6/12)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동으로 평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대해 "북한이 좋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good thing)'"이라고 말했음. 눌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이웃국가들에 대해 어떤 형태의 도발적인 언행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적했음.
- 그는 특히 이른바 '2·29 합의'에 언급, "북한은 몇 주일 만에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으로) 이를 묵살했다"면서 "그렇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로,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눌런드 대변인은 최근 북미 간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



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최근에는 없었다"고 답했음. 북한은 지난 9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남한 당국이 고의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 올리려 하고 있으나 그러한 것(핵실험)은 계획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美상원, 北정치범수용소 실태 DB화 추진(6/14)

- 미국 의회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의원은 지난달말 세출위에 제출한 국무부 대외운영 및 관련 사업 예산 법안에서 이른바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을 활용해 북한내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DB를 구축하도록 했음.
- 이 법안은 또 관련 DB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토록 했음. 특히 최근 국제적 인권 이슈로 부상한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와 관련, 탈북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중국내 탈북자 보호 활동에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음.
- 법안은 이와 함께 '국제방송운영(IBC)'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 896만 달러 이상을 지원토록 했음.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미 북한인권위원회(HRNC)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다루면서 미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이 법안이 상원 세출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 관련 예산으로 배정될 것"이라면서 "하원에서도 별도의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킹 특사 "美, 北내부에 정보유입 의지 있어"(6/14)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4일 "미국은 북한 내부로 정보 유입을 늘리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음. 킹 특사는 이날 통일연구원이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이란 주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사이오 인권포럼'에 참석해 "보다 열린 정보 환경은 북한 주민의 의식화에 이바지한다. 북한의 (정보) 봉쇄를 풀는 것은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또 "북한의 새 지도부는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이 변명과 안보로 가는 길은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규창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북한에서는 단기적으로 공안기관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사회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그는 "경제난과 식량난도 본질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의



시장활동과 당국의 통제 사이에 갈등 요소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미국 민주주의재단의 린 리 박사는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탈북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탈북 청년들은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경험했으며 자신들의 고향을 해방하고 재건하려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이어 "이들은 북한이 개방됐을 때 남북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중·북 관계

● <中인민일보, 北 미화 기사로 누리꾼 비판 '역풍'>(6/11)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북한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하루 다섯끼를 먹는 등 나라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살아간다는 기사를 실었다가 독자들로부터 현실을 외면한 내용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음. 인민일보는 11일 국제면에 '조선(북한)의 미래,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제목의 북한 방문기를 실었음. 이 기사는 인민일보 여기자들이 평양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한 북한 노동신문 여기자들의 안내를 받아 평양산원, 창광유치원, 만경대소년궁 등을 둘러보고 돌아와 쓴 방문기임.
- 인민일보는 창광유치원에서 생활하는 800여명의 어린이들이 전문 영양사의 책임 아래 하루 다섯끼를 먹는 등 각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썼음. 인민일보는 이곳 아이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공무원, 예술가, 기자 등으로 '공무가 바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민일보는 매년 2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는 평양산원이 산모와 아이들에게 완전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녀자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인민일보는 북한에서 어린이들이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감개무량했다면서 교육 중시 정책이 북한이 부국강병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음.
- 그러나 수도 평양의 몇몇 시설만을 집중 조명하고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 현실을 외면한 이 기사는 중국 누리꾼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됐음.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쿠파닷컴 뉴스 코너에서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현재 이 기사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은 37명에 불과하고 압도적인 다수인 1천620명이 '가소롭다'는 반응을 보였음. 'Enjoy-阿瑪尼'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시나닷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하루 다섯끼를 먹는다는 인민일보 기사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뉴스"라고 조소했음. 누리꾼 '安智'는 "이게 북한 사람이 쓴 기사인가, 아니면 중국 사람이 쓴 기사인가. 어떻게 이런 거짓을 쓸 수 있는가"라며 분개했음.



● 중국군, 압록강서 부교 이용해 도하 훈련(6/13)

-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압록강변에서 중국군이 도하 훈련을 하는 현장이 확인됐음. 중국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 4시. 압록강을 끼고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단둥 시내 중심가에서 강변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7~8km가량 떨어진 강가에서 얼룩무늬 군복에 주황색 구명조끼를 착용한 중국군 100여명이 부교(浮橋)를 이용해 도하 훈련을 하고 있었음. 군인들은 6~7척의 소형 선박으로 길이 20~30m의 부교 10여개를 강 이쪽저쪽으로 이동시키며 유사시 인원과 장비가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임시교량 설치 훈련에 열중했음.
- 해당 지역은 중국 쪽 강가에서 강 건너 북한 신의주까지의 거리가 400~500m에 불과한 지점임. 중국군의 훈련이 진행되던 시각에 강 맞은편 신의주 쪽 강가에는 정박 중인 북한 화물선 몇 척이 눈에 띄는 별다른 인원이나 장비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음.
- 단둥 주민들은 예전에도 중국군의 압록강 도하 훈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음. 한 주민은 "오늘 훈련은 오전부터 진행됐는데 올해 이전에도 중국군이 압록강에서 (오늘과) 같은 훈련을 하는 것을 2~3차례 봤다"고 말했음. 다른 주민은 "부교를 동원한 군인들의 압록강 도하 훈련은 대개 여름철에 실시된다"고 전했음. 훈련 지점을 지나는 왕복 2차로 강변도로에는 차량이 정차하거나 민간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통제원들도 배치됐음.
- 중국은 지난 2003년 9월 무장경찰이 맡던 북·중 국경지대 경비를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으로 이관했음. 이듬해 7월 일본 언론들이 탈북지원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압록강에서 중국군이 도하훈련을 했다고 보도하자 중국의 관영 언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음. 당시 중국 정부는 일본 매체 보도에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음. 북한과 국경을 맞댄 단둥은 중국 내 대북 교역의 최대 거점이면서도 탈북자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 정세에 민감한 지역임. 이번 훈련은 일반인이 차를 타고 지나면서 훈련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시행된 데다 주기적으로 이뤄졌다는 주민들의 증언 등으로 미뤄 중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임.
- 서방 일각에서는 북한에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선 시점에 실시된 훈련의 목적이 유사시 북한 난민 대량 유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음. 일본 교도통신은 최근 기사에서 "임시로 설치한 부교에서 벌이는 압록강 도하 훈련이 매년 6월 실시된다"고 보도하면서 북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훈련은 북한의 유사시를 상정한 것이고,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 난민 유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음.
- 북중 관계의 근간은 상대국이 공격받으면 군사 개입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중조(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임. 이 조약은 중국과 북한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 1992년 한중 수교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학계와 외교계에서는 조약상의 군대 자동개입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만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 조항에 손을 대지 않고 있음.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조약은 상호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조약으로, 그동안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라. 러·북 관계

● 김정은, 푸틴에 러 국경절 축전(6/12)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2일 러시아 국경절에 즈음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클린턴, 내달 여수엑스포 축하차 방한"(6/1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달 초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축하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할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워싱턴DC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여수엑스포 미국의 날'을 전후로 방한기로 하고, 청와대 및 외교통상부 등과 체류 일정을 최종 조율중임. 클린턴 장관은 방한기간에 여수엑스포 현장에 설치된 '미국 전시관(USA Pavilion)'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이밖에도 서울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북핵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1월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7개월여만임.
-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클린턴 장관은 다음달 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순방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일본과 캄보디아도 잇따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클린턴 장관은 이날 매사추세츠주(州)의 한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달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재건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또 다음달 12~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도 참석할 예정임. 이번 ARF에는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근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제3차 핵실험 가능성 등과 관련해 북·미간 장관급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됨.

● 美레빈 "방어목적 사거리 연장 찬성"(6/12)

-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민주·미시간) 의원은 12일(현지시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이 비(非) 위협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 이를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



각한다"고 답했음. 그는 다만 "사거리 연장이 공격적인 조치로 인식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음. 최근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레빈 의원의 언급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임. 그러나 미사일 기술의 국제 비확산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상황도 고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 세미나에 동참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부 의장은 "미사일 사거리는 기술적인 문제도, 계획의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현실적으로 주변국의 이해가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음. 국무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 정부는 한국의 안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재래식 전력을 비롯해 미사일 방어, 핵 능력, 전략 원차 등을 포함해 모든 범위의 동맹 역량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주기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지역 및 글로벌 비확산 목적과 일관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핵심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3~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양국간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음.
- 레빈 위원장은 이와 함께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예산의 일부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음. 그는 "가구당 한달에 약 1만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거비 부문에서 일부 계획된 것에서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레빈 위원장은 특히 "한국내 우리 병력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밝혀 한반도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 그는 이밖에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언급,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전권을 한국측에 넘기는 것이나 이는 오랜기간 지연됐다"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국방, '2+2회의' 참석차 방미(6/13)

-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출국했음. 미국 국무부에서 14일 개최되는 2+2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김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함.
-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인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방안, 한반도 지역문제, 범세계적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임. 특히 양측은 회의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핵실험 등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 한반도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 채택 이후 아·태지역 군사력 재조정에 대한 미측의 설명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인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정식 의제가 아니지만 회의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300km로 제한된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우리측은 800km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측은 500km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2+2회의는 2010년 7월21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 한미 2+2회담 본회의 14일 개최..대북메시지 발표(6/14)

- 한미 양국은 13~14일(현지시간)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열어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공조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첫번째 회의에 이어 미국에서 열리는 두번째 2+2회담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에서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미국측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참석함. 임성남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한국 대표단에 포함됐다.
- 양국은 특히 지난 4월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위협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계획이다. 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에 따른 아태지역에서의 전략과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 양국은 14일 오후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2+2회담 본회의가 끝난 뒤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은 정식의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도 회의에서 거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km, 탄두중량은 500kg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음.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전역을 사거리에 둘 수 있는 수준이 담보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거리를 800km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측은 500km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3일 현지에 도착한 한국측 대표단은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미측 대표단과 만찬을 가졌다.

● <美 '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설..軍 강력 부인>(6/14)

-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백지화하고 대신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음. 일부 언론은 14일 서먼 사령관이 오는 2015년 12월 전작권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더라도 연합사를 존속시키고, 대신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음. 연합사 해체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 사안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전작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 한미 연합사도 해체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그러나 군은 이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음. 국방부 윤원식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방부와 군은 (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한미는 원활한 협의 아래 전작권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국방부가 주한 미군사령부와 조율을 거쳐 이런 공식 반응을 내놨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 관계자들 역시 국방부 공식 입장과 같은 반응을 보였음. 합참의 한 관계자는 "미군과 협의하는 부서를 통해 확인해 봤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공식, 비공식 제안이 온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음. 다른 관계자는 "서면 사령관의 그런 제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음. 다만,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작권 전환과 함께 예정된 연합사 해체에 대해 그간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단체는 반대 견해를 수차례 표명해 왔음. 100만 북한군을 억제하려면 '최상의 동맹체제'로 꼽히는 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임. 더욱이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 합참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가 이를 지원하는 관계로 군사동맹체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신속한 증원전력 전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음. 이런 주장에도 합참과 주한미군 측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6월 현재 110개 전환 과제 중 60%가량이 진행됐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임. 올해는 합참과 미 KORCOM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준비와 연합 C4I(지휘통제체계) 1단계 시험평가를 완료할 계획임. 연합연습을 주도하는 합동연습지원단 창설도 올해 목표임. 합참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준비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비역 단체와 여권 일부에서도 전작권 전환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연합사 해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한미 '포괄적 미사일 연합방어' 강화 의미는>(6/15)

- 14일(현지시간) 끝난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강한 경고를 보내고, '김정은 체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핵심 결과물로 내놓았음.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끈 사안은 역시 '미사일 문제'였음. 2+2회담이 끝난 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이와 관련된 대목이 나옴. 골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이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것임.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우리는 '하층방어'(일정 고도 이하를 비행하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 체계로 미국과 다르다"고 말했음.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한국이 편입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었음. 결국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한미 양국은 이미 2010년 9월 효과적인 '효율적



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하는 등 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해왔음.

- KAMD 강화방안은 우리 군당국이 그동안 역점을 뒀던 추진해온 국방과제임. 단순하게 말하면 북한이 미사일(로켓 추진체)을 발사할 경우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국방부는 2009년 6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중요격을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서 요격미사일인 SM3를 발사하고 육상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이 무기들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웠음. 또한 핵과 미사일이 발사 준비에 들어가면 F15K 전투기를 활용해 GPS유도폭탄(JDAM) 등으로 발사 직전 정밀타격한다는 계획임.
- 현재 한국군이 구축한 KAMD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임. 이 가운데 PAC2는 일본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는 달리 목표물 근처에서 터져 파편으로 격추시키는 방식임. PAC2 시스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목표물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결국 이번 2+2회담에서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무기 확보 작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PAC3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PAC3의 구입과 배치는 미국 주도의 MD 체제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음.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이나 지휘통제 체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김관진 장관이 '하층방어'를 강조한 것은 어쩌면 "제발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로 들림. 미국이 주도하는 MD 시스템은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임.
- 2+2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며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음. 양국 간 현안이 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 미국 측 국방 수장이 '진전을 언급하자 그 의미를 두고 많은 해석이 나옴. 김관진 장관은 이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어서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음. 미국은 핵심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대칭적 전략' 확보차원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원하는 정서는 이해하지만 미사일 기술의 국제적 비확산과 중국 등의 반응을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2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후문임.

● 한미, 주한 미2사단 연합부대로 개편 추진(6/15)

- 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주한 미 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음. 군 고위 소식통은 15일 "한국 육군과 미



국 육군이 주한 미 2사단을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부대로 만드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 중"이라면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미 2사단은 한미연합부대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과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한미동맹'의 상징성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지금처럼 한강 이북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의 역할도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미 2사단은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면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어 한강 이북에 남게 되면 이 부대를 지원할 주한미군의 포병여단(201화력여단)도 동두천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사단 예하 포병여단에는 사거리 45km의 다연장로켓(MLRS) 30여문이 배치되어 있음. 이 무기는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기계화부대를 타격하는데 동원됨.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력 재편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국 군당국에서 신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면 신연합방위체제가 현 수준 이상으로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편 합참과 주한미군 측은 북한의 국지 도발시 미군 전력을 지원받아 이를 격퇴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인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과 관련, 현재 부록문서를 작성 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면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 도발시 한미 연합군의 대응이 자칫 확전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미측의 우려감이 해소됐다"면서 "양국 공동 국지도발계획과 그 부록문서를 완성하는 데 장애물은 없다"고 전했다.

● 美 뉴욕주의 제2의 위안부 기념비 건립(6/17)

-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한국과 일본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 제2의 중군위안부 기념비가 세워졌음.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닷소카운티 아이젠하워파크 내 베테랑스 메모리얼(현충원)에는 그동안 미주 한인사회가 비밀리에 준비해온 중군위안부 기념부가 한국으로부터 도착해 건립됐음. 기념비는 닷소 카운티 공원국의 프랭크 카멜레고 부국장 입회 하에 전몰장병의 이름이 기록된 영묘(靈廟) 좌측 넓은 잔디밭 중앙에 자리잡았음. 기념비는 중군위안부 희생자들의 고통과 처절함,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를 상징하기 위해 붉은색 화강석으로 제작됐음. 앞으로 기념비의 관리와 보수는 닷소카운티 정부가 책임짐.
- 한미공공정책위원회 등 미주 한인단체들은 제2의 중군위안부 기념비 건



설을 위해 은밀히 카운티정부와 협의해 왔음. 제막식은 오는 20일 강운태 광주시장의 미국 방문에 맞추어 열림. 한인단체들은 일본 측의 방해 공작을 우려해 모든 일을 비밀리에 추진했으며 통상 2년 걸리는 기념비 설치 허락, 장소 선정, 기념비 위원회 승인, 도안 및 제작, 공원국 설치 허가증 발행, 설치의 과정을 2주일 반 만에 마쳤음. 기념비 위원회는 카운티 정부와는 별도로 공원국, 원호처, 참전용사회등이 위원으로 돼 있어 향후 카운티 정부로서도 이 기념비를 함부로 철거하지 못함.

- 기념비 비문에는 일본군이 '성적인 노예(Sexual Slavery)'로 삼기 위해 20만명이 넘는 소녀들을 강제로 납치해 갔고 이들에 대해 일본 군인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하고 가증스러운 범죄(Heinous Crime)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 기념비에 장식된 그림은 위안부가 학대받고 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가수 김장훈씨와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제작했음. 제작 주체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낫소카운티와 에드 만가노 카운티장이, 재미 한인사회를 대표해서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광주광역시가 기록돼 있음. 공공정책위 이철우 회장은 "일본 정부와 의원들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의 기림비 철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번 기념비는 한국과 미국의 지자체와 재미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제작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재미 일본인들도 감히 철거를 거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한미, '한반도 MD' 통합운용체계 구축키로(6/17)

- 한국과 미국은 사거리가 한반도 내에 국한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MD)를 통합해 구축,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한국과 주한미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MD체계를 통합해 '한반도 MD'(KAMD체계)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됨.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17일 "한미 미사일사거리 연장 협상은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 더 늘리겠다는 것을 포함해 주한미군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는 합의도 결국 통합운용체계를 의미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양국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포함해 요격 미사일 수량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개발 장소 등에 대한 탐지, 식별체계 등의 구축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군이 보유한 요격 수단인 패트리엇(PAC-2) 미사일,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Ⅱ), 순항미사일(현무-3), 이지스 구축함과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와 정찰·위성 감시체계를 통합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12월 말 경기도 오산에 구축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계 통제소 등을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 제35 방공포여단에는 PAC-2, PAC-3 미사일을 갖춘 패트리엇 2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음. 미측은 이 여단의 장비와 인력을 증강할 계획임.

- 소식통은 "한반도 내에 북한의 미사일이 낙하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예외일 수 없다"면서 "이번 2+2회담을 통해 독자적인 요격 체계보다는 통합운용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리언 패테타 미국 국방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계획을 '창조적'(creative)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통합운용체계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미·일 공동의 MD(미사일방어) 체계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주한미군의 요격·감시체계를 통합운용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머리 맞댄다(6/14)

- 여성가족부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간 청소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5일 오전 9시30분 서울올림픽파크호텔 및 인근 수변 무대에서 '한·중 청소년의 날' 행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금래 장관을 비롯해 청소년단체장, 한·중 청소년과 지도자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중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세미나'와 '한국 음식 체험 및 전통놀이 한마당'이 진행됨. 인터넷 중독 예방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중 양국 청소년 문제로 대두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됨.
- 유흥식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약 12.4%로 성인의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이 약 14.0%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인터넷 이용 윤리교육을 하고, 정부에서 장기간 기숙형 치료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할 예정임. 그는 또 청소년들 스스로 불건전·불법적 정보를 감시해 미디어 소비를 줄이고 체육활동, 봉사활동과 같은 대안 활동으로 대처하자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 다이어트(Media Diet)' 계획과 '편(Fun) & 뛰어놀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자고 제안했음.
- 양수이지엔 중국청소년연구센터 연구원은 2010년 발표한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 상황 관련 데이터 보고서' 등 분석 결과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성년 네티즌 중 인터넷 중독률은 6.8%이며 인터넷 중독 미성년자가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41.9%로 비 중독 미성년자보다 24.4%나 높게 나타났음.
-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2011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



5-9세 아동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7.9%, 10-19세 청소년 중독률은 10.4%로 중국보다 다소 높음. 세미나에 이어 오후에는 '한국 음식체험 및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가 서울올림픽파크텔과 인근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서 열림. 중국 청소년들은 김치, 비빔밥, 한과, 떡 등 한국 전통음식과 윷놀이, 한지 제기 만들기, 왕 팽이치기, 널뛰기 등 한국 전통놀이 기구를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임.

● 중국 길림성 당서기 17일 방한(6/14)

- 쑨정차이(孫政才) 중국 길림성 당서기가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음.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쑨 당서기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한·길림성 경제무역 교류회 등에 참석할 예정임. 이번 쑨 당서기의 방한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 "한국 관점서 만리장성 그리 거대하지 않다"〈佛紙〉(6/14)

- 프랑스의 유력지 르 몽드가 14일 만리장성 길이 연장을 놓고 한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보도했음. 르 몽드는 이날 '만리장성, 한국의 관점에서 그렇게 거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려 발표한데 대해 한국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 르 몽드에 따르면, 중국은 만리장성의 전체 길이가 종전 8천850km가 아닌 2만1천196km로 서부 신장자치구에서 동부 헤이룽장성까지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음. 한국 언론과 학계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구려와 발해 시대에 건축된 성벽까지도 만리장성에 추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음. 한국이 만리장성에 관한 중국의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한국은 이미 2009년에도 중국이 고구려 시대에 세워진 박작성을 포함시켰다고 항의했었음.
- 한국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중국의 만리장성 연장 시도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이성재 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지난 2002년 시작돼 2006년 종결된 '동북공정과 연결시켜 "중국내 다민족 사회를 통합하면서 국가적 통일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음.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중국이 역사적 사실을 오도한 내용이 있다면 엄정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은 한국의 이의 제기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 미·중 관계

● 〈美의 '한 자녀 정책' 비판에 中 반발 예상〉(6/12)

- 미국이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11일 강제 낙태수술 위기에 처한 차오루이라는 중국인 여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을 공격했음. 미국 정부는 중국의 강제적인 산아 제한정책을 강력히 반대해왔고 이를 줄곧 문제 삼아왔다는 게 놀런드 대변인의 언급임. 차오루이라는 여성은 둘째 아기를 임신했지만 출산하려면 15만 위안(2천76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미국 거주 인권활동가인 차이 링을 통해 알려졌고 놀런드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임.

- 실제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漢族)은 한 자녀 정책을 어기면 처벌이 엄청남. 우선 공직에서 쫓겨나며 벌금이 어마어마함. 중국의 사회부양비징수관리법에 따르면 각 성(省)·시(市)·자치구 정부는 현지사정에 따라 한 자녀 정책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부부 연간 소득의 몇 배에 달함. 베이징(北京)시는 2008년 현재 벌금액을 24만7천 위안, 텐진(天津)은 최고 19만 위안으로 정하고 있으며 저장(浙江)성은 101만 위안으로 살인적인 수준임. 이런 탓에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을 어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아울러 예상치 못한 임신은 낙태수술을 강요받는 건 일상적인 현상임.
- 이런 현실에 강하게 저항한 인물이 시각장애 인권변호사인 천광청(陳光誠 40)인. 가택연금에서 탈출해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유학 중인 천광청은 산둥(山東)성 린이(臨沂)시가 한자녀 정책에 따라 7천여 명의 여성에게 낙태 또는 불임수술을 받도록 했다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2006년 8월 해당 지역 법원에서 4년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
- 그러나 중국은 인구 대국인 현실에 비춰볼 때 한 자녀정책은 불가피하다는 태도임. 1970년대 후반부터 한 자녀정책을 강제로 시행해오는 중국은 그게 없었다면 현재 중국 인구가 17억 명을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2010년 말 현재 중국의 공식 인구는 13억4천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한 자녀정책이 없었다면 이보다 3억6천만 명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중국인구가족계획위원회의 설명임. 중국 당국은 아울러 한 자녀 정책에 대한 외부 비판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함.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놀런드 대변인의 한 자녀정책 거론에 중국 정부가 공식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美中정상 19일 멕시코서 회담.. "北문제 논의"(6/1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15일 밝혔음.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이번이 12번째"라면서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 주요 20개국(G20)이 이뤄낸 진전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음. 로즈 부보좌관은 특히 "두 정상은 북한과 이란문제 등 안보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19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



회담은 지난 3월말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약 3개월만임.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17일 밤 멕시코에 도착한 뒤 18일에는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담할 것이라고 로즈 부보좌관은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푸틴 대통령은 최근 대선 승리로 취임한 이후 처음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는 셈임. 한편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정상들은 전세계 경제성장 제고 방안과 중국 위안화 탄력성 확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 미·일 관계

● 美 신형 수직이착륙기 또 추락..日 "배치 연기"(6/14)

- 미군의 신형 수직이착륙 수송기의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縄) 배치를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14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군 수송기 CV-22 오스프리는 13일 오후 6시45분(현지시각.한국시각 14일 오전 7시45분)께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미 공군 기지에서 훈련 도중 추락했음. 탑승했던 5명이 부상했음.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음. 오스프리는 지난 4월 모로코에서도 추락해 4명이 숨지거나 다쳤음. 당시에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음. 미 해병대는 일본측에 비공식적으로 "모로코 사고는 기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인적 실수가 원인"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측은 잇단 사고에 민감하게 반응했음.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에 미 해병대용 기종인 MV-22 오스프리를 배치할 예정이기 때문임.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플로리다) 사고에 대해 하루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일본 정부는 상세한 사고 내용을 알 수 없는 한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달 20일께 아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 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한 뒤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 배치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뒤로 미루겠다는 의미임.
-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도 리온 패네타 미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조사결과를 빨리 알려달라고 요청했음. 오스프리는 주 날개 양쪽 끝에 프로펠러 부분의 각도가 변하는 경사식 회전 날개가 있어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한 뒤 고정익 비행기처럼 고속 비행을 할 수 있음.

마. 미·러 관계

● 美 국무부, 러시아 야권지도자 탄압에 우려 표시(6/12)

- 미국은 야권의 대규모 시위를 하루 앞두고 러시아 당국이 단행한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라디오방송



'에호 모스크비(모스크바의 메이리)'에 따르면 놀란드 대변인은 러시아 수사당국이 지난달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반대 시위와 관련, 야권 지도자 여러 명의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회 질서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법률을 채택한 것 등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음.

- 놀란드 대변인은 또 러시아 수사당국이 야권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12일 정오보다 1시간 이른 오전 11시에 야권 지도자들을 소환한 것은 이들이 시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꼬집었음. 놀란드는 "이 모든 조치들은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법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음. 놀란드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 국무장관 민주주의·인권문제 담당 부보좌관 톰 멜리아가 13~1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정부 당국자와 야권 지도자 가택 압수수색, 야권 인사 체포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러시아연방수사위원회는 모스크바에서 벌어질 야권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하루 앞둔 11일 이른 아침부터 무장 경찰력을 동원해 유명 야권 인사들의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음.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해 말 총선 이후 야권 시위를 이끌어온 유명 블로거 알렉세이 나발니, 좌파 성향 정치단체 '좌파전선' 지도자 세르게이 우달초프, 미등록 정당 '국민자유당(PARNAS)' 공동의장 보리스 넴초프, 야권 성향의 언론인 크세니야 소브차크 등이 포함됐음. 수사위원회는 이들에게 야권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12일 오전 11시까지 위원회로 출두하라는 소환장도 발부했음.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야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푸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지난달 6일 크렘린궁 인근 '볼로트나야 광장(늘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야권 시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연관된 것이라고 밝혔음. 러시아 정부와 여당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집회 질서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지금보다 150배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질서 위반 처벌 강화법을 채택한 바 있음.

● "美, 러시아제 헬기 12대 추가 구매 예정" <러시아 통신>(6/14)

- 미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무장시키기 위해 러시아제 다목적 적용 전투 헬기 Mi-17 12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14일 보도했음. 통신은 미 국방부가 상원 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으면서 이번 계약의 규모가 2억1천770만 달러(약 2천5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역시 아프간 정부군에 제공하기 위해 Mi-17 헬기 21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러시아 국영무기수출입업체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와 체결했음. 거래 규모는 3억7천500만 달러가 넘었음. 러시아는 최근 계약에 따른 헬기 공급을 완료했음. Mi-17은 옛 소련이 1960년대부터 생산한 Mi-8 헬기를 1980년대 들어 현대화한 신형 다목적 헬기 Mi-8MT의 수출용 명칭임.
- 하지만 일부 미 상원 의원들은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제 헬기 추가 구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러시아제 헬기가 같은 종류의 미제 헬기에 비해 값이 쌀 뿐 아니라 아프간 조종사들이 옛 소련시절부터 구매한 러시아제 헬기에 익숙하다며 구매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 "러-美 관계 시리아·유럽 MD 문제로 시련기"(6/15)

-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시리아 문제와 미국이 추진 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문제 때문에 시련기를 겪고 있다고 알렉세이 푸슈코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이 14일 밝혔다. 이타르 타스 통신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푸슈코프 위원장은 이날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리셋(reset·화해) 정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푸슈코프는 "미국의 유럽 MD 추진은 러-미 양국 관계를 저해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미국의 유럽 MD 계획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시리아 유혈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온 러시아와 미국은 또 최근 러시아의 대(對) 시리아 전투용 헬기 공급 의혹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위해 야권 탄압에 이용될 수 있는 전투용 헬기를 공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러시아가 그런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기 때문이다. 푸슈코프 위원장은 이어 이날 러시아가 최근 제안한 시리아 문제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에 이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란의 참여없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이란도 비록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이웃 국가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 시리아 문제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제안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6일 처음 내놨음. 그는 "코피 아난 시리아 특사의 평화 중재안 실현 등을 위해 시리아 반군 단체들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회의에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터키 및 이란 등 주요 시리아 주변국, 아랍연맹(AL), 이슬람협력기구 등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유럽연합(EU)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음. 러시아 외무부는 뒤이어 11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국제회의에는 시리아 주변 국가들과 시리아 분쟁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이란도 참여해야 한다"며 "이란의 참여 없이는 시리아에 대한 건설적인 국제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고 밝혔음.
- 한편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시리아 사태 해결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하지만 이 회의에 이란이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영국 외무부 보도문에 따르면 헤이그 장관은 이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열린 아프간 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헤이그 장관은 시리아 문제 국제회의가 시리아 내 권력 이양 계획과 아난 특사의 평화 중재안 실현 방안 등을 포함한 시리아 정치 개혁의 원칙들을 도출해 내는 모임이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문은 설명했다.

바. 중·일 관계

● **중외교부 "日 다오위다오 낚시대회는 코미디"(6/11)**

- 일본 우익 세력이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에서 대규모 낚시 대회를 연 것에 대해 중국이 '코미디'라고 규정하면서 의의를 깎아내렸다.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코미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로서 중국은 이에 대한 다툼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일본의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불법,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일 관계의 큰 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본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보수 인사 120여명은 지난 10일 다오위다오 근해에서 '주권 시위' 성격의 대규모 낚시 대회를 벌였다.

● **중신화 "日정부, 다오위다오 매입 코미디 멈춰라"(6/14)**

-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이 일본 정부가 나서서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사들이기 '코미디(鬧劇)'를 제지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14일 내보낸 국제시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반(半)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탓에 일본 내에서 다오위다오 매입 열풍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의 매입 제안에 이은 우익세력의 결집, 계좌개설을 통한 송금, 의회의 질문 공세, 낚시대회를 빙자한 정치인들의 다오위다오 시찰 등은 일본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런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게 신화통신 주장의 핵심임.
- 신화통신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중국의 영토인 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은 중일 중앙정부 간에 해결돼야 하며 개인 또는 지방정부가 낚시 문제는 아닐뿐더러 매입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내에서 다오위다오 문제가 일방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당파적 이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통신은 아울러 최근 나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가 다오위다오 매입 열풍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소신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질책성 경고를 하고 나선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일본 정부의 그런 행위는 다오위다오 매입



주장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했음.

- 신화통신은 지금까지 중일 양국은 서로 자극하지 않고 과격한 행동을 삼가면서 다오위다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작금 보이는 것처럼 일본이 코미디 활극을 지속한다면 조만간 심각한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음. 통신은 중일 우호관계가 파괴되고 양국관계의 기초가 요동칠 수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안정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올해 들어 다오위다오 매입 모금 운동이 계속되고 지난 10일 일본 우익 인사들이 다오위다오 부근에서 대규모 낚시 행사를 빙자한 주권 시위를 한 데 대해 중국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음.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코미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사. 일·러 관계

● "日 외무상 곧 러시아 방문 예정" <러 하원의장> (6/11)

- 일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이 11일(현지 시간) 밝혔음.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나리슈킨 의장은 이날 외무성을 찾아 겐바 외무상과 면담하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 그는 당신의 실무 방문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나리슈킨 의장은 러-일 외교 대표 사이의 접촉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최근 6개월 동안에만도 5차례의 회동이 있었다"고 상기시켰음. 나리슈킨 의장은 또 "양국 간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를 위해 의원 외교의 가능성과 경험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겐바 외무상도 러-일 양국 간 전면적 협력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리슈킨 의장은 방일 기간 중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의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겐바 외무상은 방러를 통해 양국 간의 오랜 현안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일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집권 이후 쿠릴열도 분쟁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루(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제2차 세계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아. 기 타

● 서면사령관 "헬기대대·탄도탄 전력증강 요청" (6/12)

- 제임스 서면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헬기



1대대 증강과 탄도·유도탄 방어 전력 확충을 미국 국방부와 합참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면 사령관은 이날 오전 육군협회(회장 백선엽)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강연을 통해 "미 2사단과 35 방공포여단의 인력과 전력 확충을 요청했다"면서 "공격정찰헬기대대 확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면 사령관이 요청한 인력과 전력은 이라크전 때 차출됐다가 복귀하지 않은 아파치 헬기 1대대를 비롯한 탄도·유도탄 방어 전력을 의미한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전했다.

- 연합사령관이 헬기 대대 증강과 탄도·유도탄 확충을 미국 군 당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주한미군은 애초 아파치 헬기 3개 대대를 운용해왔으나 2004년과 2009년 각각 1개 대대씩 철수한 뒤 현재는 1개 대대 24대만을 운용하고 있음. 35 방공포여단은 북한의 탄도·유도탄 요격을 위한 페트리엇 2개 대대를 운용 중임.
- 서면 사령관은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은 동맹국과 한반도의 평화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한반도에 해병대 능력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해군 전력의 증강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 미 2사단의 전력은 완벽하게 현대화되어 있다"면서 "신형 전차(M1A2 SEP), 최신형 블랙호크 헬기가 들어와 있으나 앞으로 더욱 전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이버 능력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면 사령관은 한국의 병력 감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전쟁은 병력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와 훈련 수준에 달렸다"면서 "한국군은 탁월한 전문성과 고급능력을 갖춘 부임. 최신식 무기와 능력을 계속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美, 한국 등 7개국 이란제재법 예외 적용(종합)(6/12)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미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은 이번 예외 적용국가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클린턴 장관은 "이번 제재는 이란에 대해 핵무기 보유 시도를 중단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란산 원유판매 감축을 통해 이란 지도자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오는 18~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대(對) 이란 협상을 언급한 뒤 "미 정



부는 이란이 국제사회와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면 서 "이란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의 공식 발표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는 결정사항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 한편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혀 이란제재법을 강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백악관은 "최근 에너지정보청(EIA)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은 1,2월에 비해 3,4월에 완화됐고, 이런 추세가 5월에도 계속됐다"면서 "일부 공급차질이 있었으나 이란 이외 국가들의 생산확대와 수요감소로 인해 시장불안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나라들이 이란산 원유수입을 상당히 줄여도 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일, 中 미사일탐재차량 北 수출 알고도 묵인"(6/13)

- 중국이 북한에 장거리탄도미사일 운반 차량을 수출한 사실을 한국과 미국, 일본이 확인하고도 유엔에 제재를 요구하지 않는 등 묵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작년 8월 탄도미사일 운반·발사용 대형 특수차량 4대를 북한에 수출을 사실을 일본 정부가 작년 10월 확인했다고 전했다.
- 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제5관구 해상보안본부는 작년 10월 3일 오사카항에 입항한 캄보디아 선적의 화물선 '하모니 위시(HARMONY WISH)'호(1천999t급)에 대한 검문을 실시, 중국 상하이의 수출대리점이 발행한 상세한 수출 목록을 발견했다. 해상보안본부는 이 목록에서 중국군 계열의 군수기업인 우주항공과학공업(航天科工)의 자회사가 작년 5월에 개발, 생산한 대형특수차량 WS51200(전장 21m) 4대가 북한에 수출된 것을 확인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보위성은 이 화물선이 작년 8월 1일 상하이를 출항해 3일후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한 사실도 확인했다.
- 51200형 특수차량은 미사일의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바퀴 12개짜리인 2900형을 개조해 바퀴 16개짜리로 개발한 것으로,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풍(東風)31(사정 약 8천km)의 운반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임. 북한은 지난 4월15일 평양에서 있었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바퀴 16개짜리 대형 차량 8대를 공개했으며, 한미일은 이 가운데 4대가 중국에서 수출한 것과 똑같다고 단정했다. 북이 열병식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AP=연합뉴스)중국의 수출업체는 우주항공과학공업의 관련 기업으로 보이는 우한(武漢) 삼강수출입공사(三江輸出入公社)였으며 북한의 수입회사는 '림목 종합



무역회사였음. 북한의 수입회사는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무기수출입관련 기업에 대한 극비 파일에 없는 기업으로,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음.

- 한국과 미국, 일본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탑재 차량수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1874호에 위반한다는 결론을 냈으며, 미국이 4월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중국도 수출 사실을 인정했음. 하지만, 중국은 '벌목한 대형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했다고 민간용 수출이었음을 강조했음.
- 아사히신문은 일본과 미국, 한국이 이처럼 탄도미사일 탑재 차량이 북한에 수출된 사실을 알고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주도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중국의 미사일 탑재차량 수출 사실을 유엔 안보리에 제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의 공문서화(空文書化)를 불렀다고 지적했음.

● 미군, 신형 요격미사일 실험 성공"中, 재정위기 유럽상대 영향력 확대 외교"(6/13)

- 중국이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 확대를 노린 외교를 최근 부쩍 강화하고 있다고 대만 타블로이드 신문인 왕보가 중화권 매체인 대공보(大公報)를 인용, 13일 보도했음. 신문은 중국 정치권력의 핵심 정치국 상무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0월 이후 유럽을 방문한 점에 주목했음. 지난 2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아일랜드와 터키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 말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아이슬란드, 스웨덴, 폴란드, 독일 4개국을 순방하는 등 올 들어서만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잇따라 유럽을 찾았음. 이는 이례적으로 빈번한 '대유럽 외교 행보'로 중국의 외교 전략에서 유럽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음.
- 신문은 또 중국과 유럽이 이미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전략적 파트너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음. 신문은 민감한 문제인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 중국이 지원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중국 지도부의 잇따른 유럽 방문이 이 같은 의지를 사실상 내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음.

● 韓豪日+싱가포르, 7월 日 홋카이도서 PSI 항공훈련(6/13)

- 일본 외무성은 내달 3~5일 홋카이도(北海道) 지토세(千歲)시 항공자위대 기지 등지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4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공동 훈련을 한다고 13일 밝혔음. PSI 훈련은 방사성 물질을 수송하는 가상 적기를 지토세 기지에 착륙시켜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본이 이 훈련을 주최하는 것은 세 번째임. 2004년 10월과 2007년 10월의 훈련은 해상훈련이었고, 항공 훈련은 이번이



처음임.

● **日 "中 미사일차량 北 수출, 각국과 공조 대처"(6/13)**

- 일본 정부가 중국의 탄도미사일 탑재 차량 북한 수출 문제와 관련, 각국과 공조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음.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장거리미사일 탑재 차량 북한 수출 논란과 관련 "일본 정부로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정보를 확보한다면 관계국과 공조해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음. 후지무라 장관은 그러나 중국이 장거리미사일 탑재차량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증거를 일본이 작년 10월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확인을 피했음. 그는 다만 북한으로의 로켓 운반·발사 차량 수출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로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으나, 중국을 비롯한 관계국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를 밝히는 것은 이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흐렸음. 아사히신문은 이날 조건에서 일본이 작년 10월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장거리미사일 운반 차량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한국·미국과 공유했으나, 한미일은 이런 사실을 공표하거나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 **中, 서태평양 해군훈련 계획 발표(6/14)**

- 중국 국방부가 조만간 서태평양에서 연례 해군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훈련이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시행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전하지 않은 채 훈련 계획만 공지했음. 국방부는 "중국 해군의 훈련은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정하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된 각 측이 중국의 항행자유 등의 해상주권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그러나 최근 군사력을 급속하게 증강하는 중국이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섬)에서 필리핀과 수개월간 해상 대치를 하고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를 중심으로 한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실시하는 해군 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일각에서는 중국이 첫 항공모함인 바랴그호를 지금까지 8차례 시험 운항해왔다는 점에서 바랴그호와 연계한 해군 작전 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21~22일 한·미·일 해상훈련 실시(6/14)**

-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연합 해상훈련이 21~22일 제주 남방 해상에서 실시된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음. 이번



해상훈련은 수색·구조, 해양차단 작전 등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됨. 구축함과 군수지원함, 대잠 헬기 등이 참가함. 3국 해상훈련은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부터는 제주 남방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음. 또 23~25일에는 서해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됨.

- 미 항모 조지워싱턴 입항(자료)평택 이남 해상에서 이뤄질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할 예정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북한의 수중 침투에 대응하는 대잠수함 작전과 수상함 자유공방 기동, 잠수함 탐지 작전 등으로 실시됨. 미국은 항모와 핵잠수함 등 항모전투단이, 한국은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수상함, 경비함 등이 각각 참가함. 한미 국방부는 이날 훈련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 <중의 미사일 차량 對北수출 진실공방 '가열'(6/14)>

-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 운반 차량을 수출했느냐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음. 외견상 미국과 일본은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하고 중국은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는 양상임. 한국도 미·일 주장에 가세한 모양새임. 거래 당사국으로 지목된 북한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중국과 공조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미국과 일본은 공세 수위를 높여 중국을 바짝 죄고 있음. 일본 정부는 극비 차원의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중국의 대북 미사일 차량 수출 사실을 공개했고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적절치 못한 거래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나섰다.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중국을 직접 공격했음. 놀런드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제재하는 유엔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음. 일본 정부 역시 로켓 운반·발사 차량을 북한에 수출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처하겠다고 대응 의지를 다졌음.
- 중국의 대(對) 북한 미사일 운반차량 수출은 작년 10월 3일 오사카 항에 입항한 캄보디아 선적의 화물선 '하모니 위시(HARMONY WISH)'호(1천999t급)에 대한 일본 해상보안본부의 검문 결과를 아시아 신문이 보도하면서 불거졌음. 이 선박은 작년 8월 1일 상하이(上海)를 출발해 오사카를 거쳐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적 목록을 확인해보니 중국군 계열의 군수기업인 우주항공과학공업(航天科工)의 회사가 작년 5월에 개발, 생산한 대형특수차량 WS51200(전장 21m) 4대가 포함됐던 게 드러났음. 이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풍(東風)31(사정 약 8천km)의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임. 그러나 북한이 지난 4월 15일 평양에서의 군사 행진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바퀴 16개짜리 대형 차량 8대를 공개하면서 북한으로 간 대형특수차량들의 용처가 확인됐음.
- 한·미·일 3국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운반·탑재 차량의 북한 수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 사실을 공개할 시기만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은 딱 잡아떼고 나섰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게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임.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도구의 확산에 결연히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자체적인 반 확산 수출 법규를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그동안 위법한 물품을 수출한 적이 없고 중국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탑재 차량을 수출했다는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류 대변인의 해당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자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 사실 탄도미사일 운반·탑재 차량 수출은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을 위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입지를 '부정'하는 행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음. 그런 탓에 중국으로선 여간 난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어 보임.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미·일 3국으로선 북한 편들기에 주력해온 중국을 단죄할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함. 이런 가운데 장롄구이(張璉圭<王+鬼>)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동방조보(東方早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군수기업이 실수로 북한에 탄도미사일 운반 차량을 수출했을 가능성을 지적해 관심을 사고 있음. 장 교수는 "해당 특수차량은 군(軍)과 민간 용도로 다 쓰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북한의 무기 장비 수입은 중간상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군수기업이 수출물품의 용처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중국 국익에 손해를 끼칠 때가 있다"고 말했다.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그 성격으로 볼 때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우선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3~14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도 이 사안은 주요 의제가 될 공산이 큼. 특히 최근 미중 양국이 여러 가지 정치·외교·안보 사안을 두고 갈등과 대립을 하는 속에서 중국의 대북한 미사일 차량 수출 문제에 대한 다툼이 더 거칠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中, 한미일 해상훈련에 부정적 반응(6/14)

- 한국과 미국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의 연합훈련 계획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음.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해야지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한미일 해상훈련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중국 외교 당국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부정적 반응을 전달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씀. 한국과 미국
-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달 21~22일 제주 남방 해상에서 수색·구



조, 해양 차단 등의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함. 이어 23~25일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됨.

● 日 방위성 "이지스함 서해 배치 검토" 공식화(6/15)

- 일본이 이지스함 서해 배치 계획을 조금 더 명확히 했음.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체 대응 검증보고서에서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 3척을 배치했지만 미사일 발사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발사지점 주변 해역을 포함해 북한에 더 가까운 해역에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음. '발사지점 주변 해역'은 서해 공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0일 "방위성이 서해 쪽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일본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서해 배치를 시사하는 문구를 포함한 셈임.
- 방위성은 이번 보고서에서 자국이 보유한 이지스함 6척 중 배치 가능한 3척을 동해와 동중국해에 보낸 데 대해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지는 사태를 고려하면 타당했다"면서도 "발사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서해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성은 또 한국군과의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美사령관 "한미일 해상훈련 당연한 일"(6/16)

-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계획과 관련, "한국, 일본과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no surprise)"이라고 밝혔음.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미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동맹"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훈련은 상호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 방어체제의 결함을 찾는 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전략적 동맹인 3국이 비(非) 공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한 해당·주변국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이번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것이고, 우리의 도움으로 한·일 양국이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또 "아태지역에서 3자 혹은 다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동중국해 혹은 남중국해 등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동북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같은 언급은 중국 정부가 이번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음.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대한 견해를 묻자 "중국은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해야지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고 밝혔었음. 한·미 해군과 일본 해



상자위대는 오는 21~22일 제주 남방 해상에서 수색·구조, 해양 차단 등의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며, 이어 23~25일에는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